



구 동서독의 경제 협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 동서독 경제 협력의 경험은 남북 관계에서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경제 협력 관계에서는 상호주의 혹은 쌍무주의와 최소한의 인적 교류의 전국화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구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제공하는 급부에 대해 북한이 이행해야 할 반대 급부는 명확히 실천하도록 하고, 북한이 제공할 반대 급부는 인도주의적 조치 혹은 정치적인 반대 급부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개방 정책과는 달리 사회주의 공고화를 추진해왔던 구동독의 경우, 상응하는 구 동서독 교역에서 정부가 배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국 기업은 정부를 배제하고 아무런 제도적 보장도 없는 북한 지역에서 공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합의와 협정을 확대시켜 계약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평화적인 협력과 통일의 방법이다.

남북간의 물자 교류나 협력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 대외 정책과 함께 내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이지만, 구 동서독 교역 규모가 구동독의 내부 개혁이 없는 가운데 1985년에 이미 155억 마르크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한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경협소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된다면, 남북한 교역 규모는 10 배, 100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구 동서독간의 교역 즉 내독교역제도와 그 특징

구 동서독간의 교역 즉 내독 교역의 법적 토대는 연합국 군정법령 53호이며,

계약 상의 토대는 1951년의 베를린 협약에서 출발하므로 구 동서독 교역을 통한 경제 협력은 2차대전 후부터 긴 역사적 경험과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내독 교역은 정부 관리 교역이므로 구 동서독 정부를 위한 행정 상의 주체는 구서독 경제성 산하의 商工信託管理所(TSI: Treuhandstelle für Industrie und Handel)와 구동독의 대외교역부였다.

구 동서독은 1972년의 기본 조약 체결에서 상호 독립적인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 서독측은 양독간의 교역을 내독 거래로 인정하였고, 구동독에게 있어서 내독 거래는 구동독의 대외 거래의 일부로서 파악되었다. 구서독의 내독 교류 개념은 독일 전역을 단일 경제 단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1945년 8월의 포츠담협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독 거래에서 구서독은 구동독 산 반입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우대)부가가치세만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독 교역이 구서독측에게도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관리 무역이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므로 내독 교역을 위해 교역 당사

자는 구서독 정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구서독의 對구동독 교역 비중은 구서독의 총상품 교역량의 1%에서 1.5%에 지나지 않으나, 구동독 대외 교역의 약 8%에 달하는 비중을 갖고 있었다. 구동독에게 있어서 구서독은 구소련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교역 상대국이었다. 상품 교역은 청산 단위(VE=구서독 마르크)를 토대로 한 청산 교류 형태의 쌍무 교역이었고, 교역 물자의 가격은 반입과 반출 모두 구서독 가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독 교역은 청산 거래가 중심이 되며(특별 계정 S 계정에 의한 거래도 있었음), 또 청산 거래 계정의 貸越을 허용해줌으로써, 무이자 무역 금융 대출(Swing Facility제도)이 도입되어 교역의 확대에 이바지했다. 1964년 산업시설금융사(Gesellschaft zur Finanzierung von Industrieanlagen)가 설립됨으로써, 對구동독 플랜트 수출에 대해 연불 수출 금융 자금이 지원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움으로 내독 교역을 산업 설비 부문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구 동서독간 교역에서 특별한 협력 형태의 주요 내용

구 동서독간의 경제 협력이란 통상적인 내독 상품 거래를 넘어서는 형태의 경제 협력 방식이며, 이에 따라 통상적인 내독 거래와

병행하여 추진된 주요 경제 협력 사업은 70,80년대에 와서 생산 설비 공급 계약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구서독의 생산 시설재 공급 및 먼허 생산과 제3국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의 공동 협력 사업 그리고 용역 교역 등은 중요한 협력 사업 부분이었다. 이마 1970년 초반에 구서독의 제철 회사 Salzgitter AG와 기타 다른 회사들은 7,000만 마르크(계산 단위 VE=DM) 계약 규모의 Hennigsdorf전기제철소 설립 공사를 수주 받게 된 것을 시작으로, 대형 설비 계약이 새로운 경제 협력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기민당·기사당 및 시민당의 대연정(grand coalition) 기간에 대규모 설비 용역 계약을 수반하는 재원 동원 방법의 제도적 확립을 통하여, 이러한 대형 설비 용역 계약은 지속적인 토대를 갖게 되었다.

구 동서독간의 설비 계약은 주로 금속 분야와 화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계약 규모가 12억 마르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Buna II 계약은 1976년에 체결되어 5년 후인 1980년에 완료되었다. 금속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프로젝트의 총규모는 7억~8억 마르크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비중이 큰 산업 부문 즉, 기계 제작, 전자, 섬유를 포함한 경공업 등에서는 한 건의 예외를 제외하고 생산 설비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 수송 분야에서도 몇건의 개별 계약 체결 실적이

있었다. 貨車 구매 계약이 몇건 체결되었고, 최초의 폴크스바겐 승용차 Golf 계약도 성사된 바 있고, 화공품 운송용 특수 운반선 구매(약 9,000만 마르크 규모의 액체 가스 탱커 구매)도 이루어졌다.

자동차 회사 Volkswagenwerk는 구동독과 1984년 11월 12일 중장기 구상 교역 형태의 경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 협력 계약은 자동차 엔진 조립 라인 설비 계약으로 5억 마르크의 계약 규모에 달하며, 매년 29만 개의 1.05 리터와 1.3 리터 엔진을 구동독에서 생산하기 위해 구형 폴크스바겐(Volkswagen)의 조립 라인을 구동독에 건설하는 협력 사업이었다. 여기에서 추가하여 구동독은 1만 5,000 대의 폴크스바겐 대형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구동독은 그 대신 생산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며,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엔진을 1990년부터 매년 10만 개 구서독측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졌다. 이 협력 사업은 엔진 조립 완성을 위해 약 3억 5,000 마르크 규모의 추가적 부품 공급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협력 사업은 Buna II와 Hennigsdorf전기제철소 설비 공사를 제외하고, 1979~81년 동안 이루어졌다. 1980년과 1981년에 약 6억 마르크 규모의 생산 설비 건설 사업이 구동독측에 의해 발주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대규모의 생산 설비 공사는 더 이상 발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구

동독에서 투자 활동이 정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984년의 투자재 부문의 반출은 1975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구동독은 1970년 중반부터 서방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면허 생산을 도입하였다. 구동독에서 서방 기업 상표의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보통 구서독은 원료 및 중간재 혹은 기계를 공급했거나 생산 기술과 생산 consulting 용역을 제공했다. 이것은 일종의 중장기 구상 무역의 형태를 가졌다. 구서독측 계약 당사자는 이 상품의 품질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구동독은 상표사용권을 갖고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화를 절약하면서 고품질의 서방 제품을 생산하여 구동독의 국내 수요처에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의 품질은 구동독 자체의 소비재에 대한 품질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 형태는 대체로 식료품 분야와 기호품 분야, 예컨대 담배 등의 경우에서 이루어졌다.

라이선스 생산은 식료품 분야뿐 아니라 Salamander 상품 製靴의 생산에서도 이루어졌다. 구서독 정부는 면허 생산 방식의 경제 협력 형태의 확대를 권장해왔지만, 그 실적은 외국의 자회사와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여 1987년까지 단지 12건 정도의 면허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을 정도로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 동서독간에는 자원의 공동 개발 사업도

추진하였다. 1984년 12월에는 구동독의 Werra 지역의 가성카리 채굴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합의한 바 있다. 구서독의 채굴 업자가 이 접경 지역을 월경하여 채굴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다. 제3국에 대한 구동독과 구서독 기업과의 경제 협력은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3국에 대한 구 동서독 경제 협력의 중점 부분은 투자재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1987년까지 공동 진출 프로젝트는 12 건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용역 교역은 장기적으로 증대되어왔는데, 1984년에 와서는 용역 교역 규모는 총상품 교역 규모의 15%에 달하는 비중을 나타내었다. 용역 교역 가운데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편 일괄 지불금으로, 비록 이것은 베를린협정 상의 서비스 합의 부분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내독 교역의 영역 내에서 제상되었다는 점이다.

기타 주요한 경제 협력 내용

내독 교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 동서독간의 경제 협력 및 경제적 거래는 구서독 연방정부 재원으로부터 구동독측에 제공되었던 지불금(급부금), 구동독의 차관 도입을 위한 구서독 정부의 앞선과 보증, 구동독에 대한 구서독 민간 부분의 이전 지출, 그리고 직접 투자와 합작·합영 기업에 관해 1990년까지

견지된 구동독의 원칙과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의 합작·합영 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구서독 연방정부 재원으로부터 구동독측에 제공되는 지불금(급부금)

이 지불금은 직접·간접으로 기본 조약 체결 후 사회민주당·자민당 연립 정권기에 있어서, 구 동서독간 긴장 완화 국면에서 구동독측과 체결한 협약의 결과로 구동독측에 제공된 구서독측의 경제적 급부이다. 구동독측은 상응하는 용역 제공으로의 반대 급부 혹은 정치적 반대 급부를 제공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동독의 교통로 이용에 대한 일괄 지불금

구동독의 교통로 이용 일괄 지불금은 구동독이 구서독으로부터 수령하는 가장 중요한 지불금 가운데 하나이며 구동독의 외환 계정 상 큰 역할을 하였다.

1971년의 4대 강국 협정과 1972년 6월 3일 통행협정이 발효한 이후 베를린 출입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서독 지역에서 베를린까지의 교통 이용은 급속히 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여행자 수는 1971년 연인원 760만 명에서 1973년 1,370만 명, 1981년에 2,180만 명으로 증가했다. 베를린

출입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에 대한 통행 일괄 지불금은, 구동독측이 1970년까지 개별적으로 구서독의 여행자에게 부과한 통과료를 일괄로 구서독 연방정부가 대신하여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서독 정부가 일괄 지불 방식으로 부담하게 된 통행료는 내독 관계의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왔다. 구동독과 합의한 구서독 정부의 통행 일괄 지불금의 규모는 1972~75년 동안 매년 2억 3,500만 마르크, 1976~79년 동안 매년 4억 마르크, 1980~89년 동안 매년 5억 2,500만 마르크였다. 1972~89년 동안 구동독은 이 명목 하에 78억 마르크를 수취했으며, 또 이와 별도로 승용차에 대한 구동독 고속도로 사용료 일괄 계산금으로 1980~89년 동안 약 5억 마르크를 수취했다. 이로써 구동독 국민 경제 전체에서 이 구동독 고속도로 이용 일괄 지불금의 순효용은 아주 크다고 평가되었다.

구동독은 이 교통로 이용 일괄 지불금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부분적으로 도로 정비 및 교통 안내 시설물 설치 등을 제공하였지만, 이 일괄 지불금의 대부분에 대해 경제적 반대 급부의 제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교통로 이용 일괄 지불금은 이전까지 구동독측이 개별적으로 구동독으로 여행하는 구서독 주민에게 수령하였던 징수료를 일괄하여 구서독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구서독의 여행자 개개인은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로써 상당한 금전 및 시간 상

의 편의로 인해 구동독으로 여행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었고, 또 이 일괄 지불금은 구동독 교통 시설을 개선하는 물질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구서독측은 고속도로 일괄 사용료를 상당한 범위에서 관대하게 지불했는데, 그 이유는 고속도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통일 정책 상의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구서독 정부는 구서독 주민의 구동독 여행을 촉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70년대의 긴장 완화와 통행 협정이 구동독에게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다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구서독인의 방문 교류와 여행이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되자, 1971년에 구서독 및 서베를린 주민의 여행이 270만 회에서 1973년에 810만 회 그리고 1977년에 840만 회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구동독은 구서독 여행객에게 비자료를 징수하고 일정 금액을 강제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많은 추가적인 수입금(구서독 화폐 수입금)을 얻게 되었다. 강제 교환금(구동독 방문시에 구동독이 설정한 환율에 따라 강제로 구서독 마르크화를 구동독 마르크화로 교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환금)의 규모는 매년 약 5억 마르크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 베를린 출입 고속도로 시설에 대한 투자 참여

1975년 이래로 구서독은 베를린 통로인 고

속도로 시설의 신설과 보수·확장에 재정적으로 참여해왔다. 1975~89년간 구서독은 이를 위해 대략 24억 마르크를 지출했다. 이 투자 참여의 근거는 구서독측이 계산한 마르크貨 기준의 투자 비용과 구동독측이 추정한 구동독 마르크화 기준의 비용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이런 비교를 토대로 이루어진 투자 지출 규모는 양독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타협 과정에서는 물론 양독간을 연결하는 교통로라는 점을 참작할 때,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구동독 도로에 대한 투자 지원은 교통 일괄 부담금과는 달리 구동독측이 경제적 효익 상의 반대 급부를 엄격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 구서독이 도로 건설 투자비의 참여를 통해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구동독의 하부 구조 확충에 이바지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구동독 국민 경제의 사회적 간접 자본은 국내 저축의 사용을 통하지 않고 확대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구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육상 교통로임을 고려할 때 구서독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었다.

구서독이 통행 일괄 부담금을 명백한 목적 설정과 연계해서 합의하지 않았던 이유에서 고속도로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둘 대목이다. 베를린-함부르크간의 고속도로 건설 지원은 가장 큰 규모의 지원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 하나에

12억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구 동서독간 우편 협정이 1983년 11월 15일에 체결되어 구서독측이 구동독 우편 시설을 수지상 초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해 구서독 정부는 매년 일괄 지불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 일괄 지불금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8,500만 마르크에서 2억 마르크까지 증대되었다. 이에 대한 구동독측의 반대 급부는 ① 편지, 소포 등의 배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② 우편물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③ 지금까지 매년 매 수취인당 12개로 한정시킨 우편 배달에 의한 구동독 지역으로의 선물 반입 제한을 없애고, 또 의료품에 대한 우송 규정을 완화하고, ④ 1984년 2월 말까지 96개의 전화 라인 증설과 4개의 텔렉스 라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구동독의 차관 도입을 위한 구서독 정부의 알선과 보증

구서독 연방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구동독을 위한 차관 도입을 알선해주고 또 보증해주었다. 구서독 정부의 보증에 따라 1983년 7월과 1984년 7월에 각각 10억 마르크, 9억 5,000만 마르크 규모의 상업 차관이 구동독측에 제공되었다. 이 상업 차관 제공은 80년대 초반에 있어서 對구동독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새로운 수단으로 對구동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1982년 말 구동독은 심각한 외화 부족 사태에 직면하였다. 당시 구동독의 서방에 대한 외채는 90억~130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그 가운데 약 40%는 악성 단기 외채로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것이었다. 구서독 정부는 구동독과의 협의 후, 10억 마르크 규모의 5년 만기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 보증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Bayerische Landesbank가 간사 은행이 된 차관제공은행단은 구동독의 독일대외교역은행(DABA)에게 1983년 7월 1일과 7월 7일에 차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5억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구서독 정부의 보증은 구동독 재무부가 구서독 정부에 대해 재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재보증되었으므로 구서독 납세자들의 위험 부담은 전혀 없다.

이러한 구서독측의 우호적 협력에 대해 구동독측은 상당한 반대 급부를 제공하였다. 즉, 구 동서독 국경의 통제 관행과 통행 절차상의 개선이 구동독측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3년 9월 26일 구동독측(Schalck-Golodkowski)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바이에른주 수상(행정 수반) Strau에게 통고하였다.

구동독은 경계선 지역의 4 군데에 SM-70 자동 발사 장치를 철거하고, 구동독국경수비대는 연이어 5만 4,000 개의 SM-70 자동 발사 장치 모두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동독측은 아직 잔존해 있던 지뢰를 제거하고, 그 대신 전기 안전 장치를 후방에 설

치하였다. 이로써 국경선이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온건한 방식으로 국경선 통제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달성된 것이다.

1984년 7월에 25 개 서독 은행, 특히 Deutsche Bank의 지도 아래 룩셈부르크(Luxemburg)를 통해, 구동독의 독일대외무역은행에게 5년 만기의 9억 5,000만 마르크 규모의 유로 차관을 통상적 금융 시장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차관 제공 컨소시엄은 구서독의 卅 지방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은행도 참여하였다. 구서독 정부는 이 차관을 허가했고, 이 차관에 대한 보증을 인수하였다.

구서독측의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로서 구동독은 구서독 정부로부터 수령해왔던 일괄통행료 지불금에 대한 청구권을 구서독 정부에 양도해주었던 것이다. 차관의 금융 조건으로서 차관 금리는 리보(Libor) 금리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인 5.375%, 5.625%, 6.5%였다. 만기는 각각 5년이며 차관 금액의 1/10이 매 반년마다 상환되는 것이었다. 1984년 차관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는 1983년 첫번째 차관 제공의 경우와는 달리, 구서독 정부는 보증 인수에 대해 리보 금리 추가분에 대해 1/4만큼의 보증료까지 수취했다.

상술한 두 건의 상업 차관은 구 동서독 교역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다. 즉, 이 두 건의 차관은 발생 원천 상으로도, 사용 목적 상으로도 전혀 구속된 것이 없는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차관이었다. 이 두 차관 계

약은 구서독측 차관공여단의 상업적 흥미를 끄는 것이며, 구동독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구동독의 대외 지불 능력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뿐 아니라, 특히 구서독의 거물 정치가 Franz Joseph Straß가 주선한 첫번째의 10억 마르크 규모의 차관은, 구서독에서 기민당 중심의 정권이 정권을 인수한 후 우파인 기민당 정부가 독일 통일 정책에 있어서 前사민당 정부의 독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라는 명백한 입장 표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차관에 대한 구동독의 반대 급부는 구동독의 주권 하에 결정한 일련의 정치적인 온건한 조치를 단행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연금 수령자, 산재 및 장애 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최저 교환금이 1980년 10월 이래로 25 마르크였던 것을 15 마르크로 하향 조정함.
- ② 구서독 및 서베를린 주민이 연간 최장 30 일간 구동독 지역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을 45 일까지 확대 조치함.
- ③ 구동독의 노령 연금 수령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에 대한 구서독 및 서베를린 방문 기회를 확대함. 즉, 친척 방문뿐 아니라 친지 방문 목적까지 포함시킴과 동시에 그 기간도 30 일에서 60 일까지로 확대함.

- ④ 구동독에서 구서독 및 서베를린을 방문하는 여행자와 지참물의 가치 제한 범위를 1 일 체류에 대해, 이전의 20 마르크에서 100 마르크로 확대시키고, 4 일간의 체재에 대해서는 200 마르크로 함.
- ⑤ 구동독 경계선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복수 출입증의 유효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대시킴.
- ⑥ 기타 여러 가지의 여행 부수 사항에 있어서 편의 제공을 확대함.

구동독에 대한 구서독 민간 부문의 이전 지출

○ 최저 교환금과 비자료 등의 지불금

구서독측이 일방적으로 구동독에 지불하는 이전 지출 가운데 민간이 지불하는 주요 항목은, 구서독과 서베를린 지역 주민이 구동독 방문시에 일정 금액 이상의 구서독 마르크화를 구동독 마르크화로 강제 교환하는 자금과 비자료 명목의 지불금이었다. 비록 서베를린 지역 주민 여행객의 구동독 입국 허가료는 구서독 연방정부가 부담하여 일방적인 자금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자금의 성격이 민간 방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서독 주민이 지불하는 것과 분리할 필요가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 강제 교환 의무와 비자료 지불 의무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인 1989년 12월 24일까지 존재했다. 구서독 정부의 지불금은 구서독의 연방 예산에 반영되어 정확한 액수가

책정되었던 것이었지만, 구서독 민간이 방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강제적으로 지불했던 강제 교환금과 비자료 등의 구동독 수입금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1970~89년 동안 구동독의 수입금은 약 50억 마르크 가량으로 추정된다. 구 동서독간의 여행에서 구동독 주민들의 마르크貨 지출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구서독측으로부터의 강제 교환금과 비자료 수입은 구동독측에서 볼 때 순수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강제 교환금에 대한 교환 비율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구서독 및 서베를린 주민이 지출하는 마르크貨는 상당 부문 증여의 성격을 갖게 되며, 다른 한편 구동독 화폐로 교환된 액수만큼 구동독 주민을 위한 지원 성격의 초과 구매력으로 작용했다. 구동독에서 구매한 물품 가운데 많은 부분은 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되므로, 구동독에서 구서독 반출을 위한 구매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 구서독 주민의 구동독 주민에 대한 이전 지출

1974년에 발효한 구동독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구동독 주민들도 구서독 마르크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 마르크貨의 이전 지출이 점차로 확대되어갈 수 있었다. 즉, 구서독 주민과 서베를린 주민이 구동독을 방문하여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구서독 마르크

화폐를 증여하거나 쓰고 남은 돈을 주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동독에서 구서독을 방문하는 연금 생활자 등의 여행객들도 구서독 친지로부터 증여받은 구서독 화폐를 구동독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구서독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환영금도 부분적으로 구동독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구서독의 민간 부문에서 구동독측의 연고자에게로 이전된 구서독 마르크貨는 최종적으로 구동독의 Intershop(외화 전용 판매소)이나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유통되었다. 구동독은 Intershop 판매용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사용해야 했지만, 구동독은 외화 전용 상품에 대해 원가 계산상 높은 이윤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상품 가격을 책정했다. 여기에서 구동독 정부는 주류, 담배 등과 같은 Intershop 상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책정하였으므로, 구동독은 구동독 민간에게 증여된 구서독 마르크貨의 일정 부분을 최종적으로 수취하였다.

이러한 마르크貨가 통용되는 Intershop류의 상점 판매고들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민간 부문을 통한 구동독 민간 부문에로의 이전 지출 총액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00억 마르크 이상의 금액이 1970~89년간 민간 이전 지출로서 구동독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정된다.

Genex 선물 서비스는 구서독 민간인의 부탁과 경화를 지불함으로써 선물 대상을 선정

하여 판매한 후 구동독의 지정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위탁 판매소인데, 여기서는 주로 구동독 제품이 판매되었으나 이것의 성격은 구동독에로의 외화 증여라는 기능을 갖는다. 이 Genex 서비스의 매출 총액은 매년 약 1억 5,000만~2억 마르크로 추정되며, 1970~89년간 약 30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도 민간의 경제 협력 형태인 이전 지출 부문에 추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동독은 외환 수지 상으로 이상의 이전 지출 금액만큼 상당한 원조적 성격의 경제 협력 혜택을 받아왔다. Intershop의 상품들은 대부분 구서독産 또는 기타 외국산 제품이고, Genex의 상품들도 부분적으로 구서독産 또는 기타 외국산 제품들이며, 이러한 상점에서의 상품 구입을 위해서는 외화나 청산 단위 화폐가 필요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상과 같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이전 지출은 구동독 경제 전체에 큰 도움이 되었고, 구동독 주민들에게 불자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데에도 공헌했으며, 구동독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질적으로나 수량적으로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구서독의 공공 부문 예산으로 사용된 이전 지불금과 민간 부문의 마르크화 이전 지출금으로 구성된 구동독의 구서독 마르크화 수입금 규모는 연 20억~25억 마르크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의 금액은 구동독의

외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1981년과 1982년의 경우에도, 구동독의 對서방 교역에서 발생한 채무 이자 지급 의무를 충당하는 데 충분할 만큼 구동독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구서독 마르크화 이전 지불금의 증대는 70년대 이래 구 동서독 경제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역동적 요소였다고 평가된다.

○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구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구동독에 억류되어 있는 구동독 정치범을 구서독으로 석방시킨다든가 혹은 구서독으로의 이산 가족 결합 및 이주를 실현시킬 목적에서 구서독측은 구동독에 대해 많은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였다.

1963년에 처음으로 구동독에서 구서독으로 정치범의 석방이 실현된 이래 1990년까지 총 3만 3,755 명의 정치범이 구서독 쪽으로 석방되었고, 21만 5,019 명의 이산 가족이 구서독에 이주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구서독측이 경제적 지렛대를 작용시킨 까닭이었다.

1970년 초까지 이산 가족 대상자 26 명의 리스트에 대한 석방 가격은 30만 마르크가 거래 기준이었으나 그 후 50만 마르크로 인상되었다. 1977년부터 5만 마르크 금액 기준에서 26 명의 리스트가 거래되었고, 특별 케이스의 26 명 리스트에 대해서는 10만 마르크가 거래 가격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석

방 가격들은 현금 지불 대신에 열대 과일, 화학 제품 등 구동독이 필요로 하는 상품으로 구동독측에 제공되었다. 단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 지불 방식을 통해 ‘人身 賣買’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범들의 석방과 구서독 이주를 위한 인신 매매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총규모는 얼마인가 하는 것은 보안 사항이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서독측의 지불수단은 구서독 마르크貨가 아니고, 거의 전적으로 기독교복음교회의 사회 사업 기구가 주선한 외화 가치의 원료 공급에 국한되고 있었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물론, 구동독은 이렇게 공급받은 원료의 세계 시장 가격만큼 구동독측이 원료의 구입에 지출하게 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1987년 7월 22일자 의 서독 유력지 die Welt의 보도에 의하면, 내륙관계부의 당시 차관인 Rehlinger는 베를린 장벽의 건조 이래로 약 20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약 20억~30억 마르크가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따른 정치범 석방과 이산 가족 결합을 위해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출 금액은 구서독측이 구동독의 도로 건설 등의 투자에 지출했던 만큼의 막대한 자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동독측에서 볼 때, 이러한 성격의 자금이 구서독의 구동독 하부 구조 투자 비용 참여보다도 더 큰 효용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동독은 부족한 외화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절감하는 대신, 구동독 경제 전체에 순이익으로 돌아오는 물자를 아무런 외환 장애도 없이 무상으로 공여받을 수 있는 정치범 인신 매매를 통해, 구동독체제에 적응시킬 수 없는 체제 교란 요소들을 체제 밖으로 추방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구서독은 구서독 이주민들의 정착비와 생계 자금 등 구서독 사회 정착 및 생계 등에 필요한 높은 지출이 요구되었으며, 또 이들을 위해 장래 지출하게 될 연금 부담 등을 떠맡게 되었지만, 인도적·통일 정책적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민간 부문의 현물 이전

구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직접적인 구서독 마르크화의 이전과 병행하여 현물 이전도 구 동서독 주민간에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쟁 직후부터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려온 구동독의 가족, 친지 등에게 구서독 민간은 현물 공여를 해왔고, 또 그 규모는 교류의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1988년 기준으로 2,400만 개의 소포물이 구동독으로 우송되었으며, 이에 반해 구동독에서 구서독으로 900만 개의 소포물이 우송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포물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현물 이전은 주로 구서독에서 구

동독으로 향한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소포를 통해 구동독으로 반입된 현물의 순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소포 내용물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므로 대단히 어렵지만, 이 순현물 이전 총액은 매년 7억 5,000만 마르크 규모로 추정됨에 따라 1970~89년간 최소한 150억 마르크 규모의 현물 이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구서독과 서베를린 주민이 구동독 지역 방문시에 지참했던 선물 등도 구동독의 물자 부족에 따라 거의 모든 여행자가 큰 선물 꾸러미를 지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 또한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이 지참물의 가치 총액은 매년 약 2억 마르크 이상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소포와 지참한 선물 등의 직간접 증여 방식을 통한 현물 이전은 최소한 200억 마르크 이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구동독 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와 공공 단체가 지불한 이전 지출에는 환영금이 큰 비중을 갖는다. 구서독 연방은행의 통합국제수지표에서 구서독을 방문한 구동독 주민에게 20억 마르크 상당의 공공 이전 지출이 기록되고 있다. 구동독 민간 부문에 대한 화폐 및 현물 이전 지출 총액은 1970~89년간에 대략 300억~400억 마르크 규모에 달했다고 추정되며, 구서독측은 이 규모만큼 구동독 주민의 경제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원조를 해준과 동시에, 구서독체제의 중요

로움을 구동독 주민의 의식·무의식 속에 입증시켜주었다고 판단된다. 즉, 독일 통일의 불질적 수단인 내독 경제 교류 가운데 순수 민간 차원에서 구서독 주민과 구동독 주민 사이의 직접적인 화폐적·물적 교류가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 동서독간의 합영·합작 사업은 없었음

독일 통일 직전인 1990년 초반까지 구 동서독 경제 협력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구 동서독간 직접 투자와 합작·합영은 구동독의 합작·합영 불허 원칙에 따라 전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구동독은 1990년까지 구서독 및 서방 기업의 투자와 합작 기업의 육성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 정책 기조는 동구의 국가 무역 국가 가운데서도 구동독만이 유일하게 구서독과의 분리 정책을 위해 견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구동독의 법학·경제학자들조차도 직접 투자, 합작·합영 기업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연구·검토하지 않았을 정도로, 서방 특히 구서독과의 경제 합작 등의 경제 협력 방식은 구동독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구동독의 합영·합작 금지를 통한 구 동서독 경제의 분단 정책은 구서독 및 서방 국가의 '민간 자본주의'에 대한 구동독의 체제 이데올로기 방어체계의 대외 경제적 부분이었다. 이것은 베를린

장벽과 구동독의 국경 봉쇄선이 구서독과 서유럽 국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철쇄 이후, 구동서독간의 국경 개방이 이루어졌고 구동독 체제 개혁의 물결 속에 낙후된 구동독 경제의 현대화와 구동독 기업의 건전화를 위한 자본 도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구동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구서독의 다수 기업들에 의해 합작 기업의 설립을 위한 실제적 조치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구동독은 1990년 1월 25일에 처음으로 '외국인 참여 기업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령'을 발표시켰다. 이 투자 법령도 구서독 투자를 포함한 서방 투자가의 관점에서는 매우 제약적인 것이고, 동구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개방화를 허락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990년 10월의 구 동서독 통일 때까지 구동독에 대한 투자가 갖는 단기적 위험때문에, 합작·합영 사업은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구 동서독 경제 협력 경험이 주는 남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체제의 폐쇄성은 인류 역사적 사례가 없을 정도이다. 구동독의 경우 냉전이 최고로 치열했던 시기인 1957년에 160만 명의 구서독인이 구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기본

조약 체결(1972년) 전인 1968년에 이미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 126만 명 이상의 구서독인이 구동독을 방문했던 실적이 있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사실상 가능케 될 수 있는 전제로서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진·선봉의 철조망 속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특수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교류·협력이 파급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양적 수준에 미달하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구 동서독의 경우, 200만~300만 명의 구서독인이 구동독 전지역에 여행할 수 있었고 교류 기간도 40년 이상임을 상기할 때, 남북한의 경제 협력 관계의 토대 구축을 위한 북한의 개혁은 경제 개혁일 뿐만 아니라 당·이데올로기·군개혁, 즉 총체적 사회정치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 동서독처럼 협약을 토대로 완전한 평화 공존이 구축될 때,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심화·확대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구 동서독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남북 관계에서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 협력 관계에서는 상호주의 혹은 쌍무주의와 최소한의 인적 교류의 전국화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구 동서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제공하는 급부에 대해 북한이 이행해야 할 반대 급부를 명확히 실천하도록 하고, 북한이 제공할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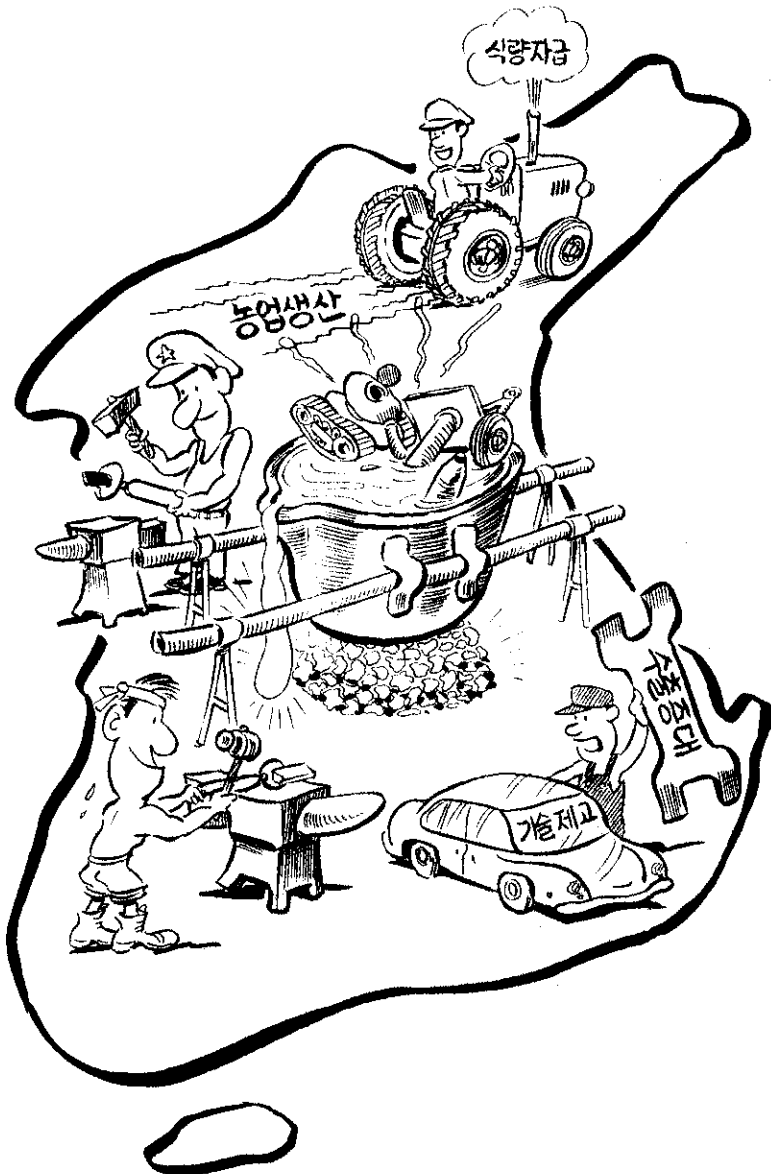
급부는 인도주의적 조치 혹은 정치적인 반대 급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개방 정책과는 달리 사회주의 공고화를 추진해왔던 구동독의 경우, 상응하는 구 동서독 교역에서 정부가 배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볼 때, 한국 기업이 정부를 배제하고 아무 제도적 보장이 없는 북한 지역에서 계산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射倖일 뿐이다.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서의 합의와 협정을 확대시켜 계약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평화적인 협력과 통일 방법이다. 구서독 정부가 구동독과의 밀월 기간에 구동독을 위해 상업 차관의 주선과 보증을 해주었던 사례에서 볼 때도, 상업적인 보편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또한 구 동서독 주민의 여행 가능성 확대 등 통일 정책 상의 반대 급부를 받아내었던 훌륭한 선례가 교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對구동독 차관의 주선과 보증 채무의 인수 과정에서도 상업적 이익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반대 급부를 받아내는 구서독측의 노련한 구동독 다루기 전술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런 쌍무주의적 원칙으로 구동독을 계약 준수 원칙과 국제 규범에 순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간의 물자 교류나 협력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과 함께 내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

이지만, 구 동서독 교역 규모가 구동독의 내부 개혁이 없는 가운데 1985년에 이미 155억 마르크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이를 주목해볼 때,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년 9월 17일 발효)에 명시된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한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경험소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된다면, 이것은 마치 구 동서독의 내독 교역 부서인 정부 기관 신탁관리소와 대외교역부의 대표가 정기적으로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접촉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 규모는 10 배, 100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중장기 시설재 공급 및 그 생산 시설로부터 생산된 물품의 반출 계약(이것은 중장기 구상 무역으로 일종의 위탁 가공의 확대된 모형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장기 시설재 공급을 위한 정부의 보험 기구가 개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공식 채널이 가동되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는 사실에 있다. 敍

〈漫評〉 24



'97년은 대포를 녹여 쟁기를...!